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73
----------	-----

2020. 3. 24.(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육미선 의원 등 6인

나. 발의일자 : 2020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3월 12일

-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육미선 의원)

가. 제안사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19.12.25.)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변경함.
 -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여성폭력, 여성폭력피해자,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시함.
(안 제2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라 ‘여성폭력’ 범위 안에 여성에 대한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
- 도지사는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 (안 제5조)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을 위탁받은 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7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안 제14조)
-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안 제15조)
- 기존 조례의 ‘충청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는 개정되는 조례의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봄.
(부칙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 (이강근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조례개정 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경기 전남 제주)

나. 주요내용 검토

- 제명을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현행 조례에서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것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업무는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소관부서에 따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개정조례안에서 제외된 '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은 「아동복지법」,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추진하고, '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기존 조례포함 또는 별도 조례 제정은 별도 검토 필요

-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뜻을 정의한 것으로,
 - 여성폭력,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조를 준용하였고,
 -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대한 정의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규정함.

- **여성폭력**
 -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 **여성폭력 피해자**
 -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 국가와 지자체 등이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 안 제5조는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6조는 충청북도의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제2항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 마다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문제가 없음.

○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 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규정된 시책 사업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0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신설>

구 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협의회 (현행)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기 능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의 협의·자문 1. 아동·여성 보호·치료 등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 및 시책 마련 2. 아동·여성안전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전개 4.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제시한 아동·여성안전관련 지역현안 해결 사업 5. 그 밖에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 원 수	20명 이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0명 이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2년, 1회 연임가능
위원구성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 여성권의 관련시설·단체에서의 추천인 3. 아동보호관련 시설·기관에서의 추천인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기관에서의 추천인 5. 긴급 또는 응급구조 등 의료기관에서의 추천인 6. 아동·여성·청소년 관련 학과 대학 교수 7.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청에서의 추천인 8.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 관련기관에서의 추천인 9.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각급 교육기관,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및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회 의	연 2회 이상 개최	연 2회 이상 개최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19. 12.25.)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보호지원에 관한 충청북도의 책임과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육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3
----------	-----

발의연월일 : 2020년 3월 4일
발의자 : 육미선, 박상돈, 최경천,
박형용, 심기보, 이상욱

1. 제안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19.12.25.)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나. 여성폭력, 여성폭력피해자,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시함. (안 제2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라 ‘여성폭력’ 범위 안에 여성에 대한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

다. 도지사는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 (안 제5조)

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을 위탁 받은 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7조)

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안 제14조)

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안 제15조)

사. 기존 조례의 ‘충청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는 개정되는 조례의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봄.

(부칙 제2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 - 18호

다. 협의 : 여성가족정책관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에

다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 상담소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내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지원 사업
2. 피해자에 대한 취학·취업 관련 지원 및 주거지원 사업
3.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 지원 사업
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모니터링 사업
5.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6.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운영 지원 사업
7.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기능)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여성가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 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
 - 가.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 다. 각급 교육기관, 교육청 등 교육기관
 - 라. 경찰 및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기관
 - 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한 충청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인가기준(認可基準)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

- 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②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자활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 ⑤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기준·신고절차, 이용규정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상담소의 설치기준·신고절차·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 용역비 소요경비 등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여성폭력 실태조사), 제7조(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0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사업 추계 및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산출

나. 추계 결과

- 여성폭력 실태조사 용역비 : 20,000천원 (3년)
- 피해상담소 운영 : 3,471,448천원 (매년)
-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1,567,602천원 (매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지원 : 243,521천원 (매년)
-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운영 지원 : 97,050천원 (매년)
- 성폭력 피해자 보호사업 등 : 882,704천원 (매년)

다. 재원조달방안

- 여성폭력 실태조사 용역비 : 도비(100%)
- 피해상담소 운영 : 국비(50%), 도비(25%), 시군비(25%)
-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국비(70%), 도비(15%), 시군비(15%)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지원 : 국비(100%)
-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운영 지원 : 국비(50%), 도비(50%)
- 성폭력 피해자 보호사업 등 : 국비(70%), 도비(15%), 시군비(15%)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6,262,325	7,534,790	7,514,790	7,514,790	7,534,790	36,361,485	
국비	3,622,003	4,346,400	4,346,400	4,346,400	4,346,400	21,007,603	
도비	1,516,112	1,816,860	1,796,860	1,796,860	1,816,860	8,743,552	
시군비	1,124,210	1,371,530	1,371,530	1,371,530	1,371,530	6,610,330	
세출	6,262,325	7,534,790	7,514,790	7,514,790	7,534,790	36,361,485	
피해 상담소 운영	3,471,448	4,165,738	4,165,738	4,165,738	4,165,738	20,134,400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567,602	1,881,122	1,881,122	1,881,122	1,881,122	9,092,09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사업	243,521	292,225	292,225	292,225	292,225	1,412,421	
폭력예방교육지역지원 기관운영	97,050	116,460	116,460	116,460	116,460	562,890	
성폭력 피해자 보호사업	240,817	288,980	288,980	288,980	288,980	1,396,737	
폭력시설 기능보강 등 기타	641,887	770,264	770,264	770,264	770,264	3,722,943	
여성폭력 실태조사 용역		20,000			20,000	40,000	
재원 조달	6,262,325	7,534,790	7,514,790	7,514,790	7,534,790	36,361,485	
의존 재원	소 계	3,622,003	4,346,400	4,346,400	4,346,400	4,346,400	21,007,603
	보조금	3,622,003	4,346,400	4,346,400	4,346,400	4,346,400	21,007,603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16,112	1,816,860	1,796,860	1,796,860	1,816,860	8,743,552
	지방세	1,516,112	1,816,860	1,796,860	1,796,860	1,816,860	8,743,552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시·군비	1,124,210	1,371,530	1,371,530	1,371,530	1,371,530	6,610,330	
기타 (민간 자부담)							